

2002년 하반기 주요 환경정책방향



윤 승 준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필자약력〉

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사('81)
한양대 기계공학과 석사('83)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석사('90)
'93.8 ~ '95.6 환경부 기술지원과장
'95.6 ~ 2000. 7 OECD 파견
2000. 8 ~ 2001. 9 지구환경과장
※ 2001. 4 부이사관 승진
2001. 9 ~ 현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1. 머리말

72년 월드컵 역사상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4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한국과 독일간의 준결승날, 전국에 모인 700만명 이상의 붉은악마가 보여준 질서의식과 응원이 끝난 후 자기 쓰레기를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10개 월드컵 개최도시 및 월드컵조직위원회와 함께 1년 전부터 이번 월드컵을 환경친화적인 경기로 치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상당 부분 그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붉은악마, 클린업리더(clean-up leader)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환경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의 환경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환경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환경월드컵의 추진

상반기에는 월드컵을 환경친화적으로 치루기 위한 시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특히 10개 개최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 난지도 쓰레

기매립장의 생태공원화 등 경기장 주변 비위생매립지의 정비, 녹색 관람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국제스포츠의 환경친화성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통해 일반 추세로 정착되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근 "환경"을 "스포츠", "문화"와 함께 올림픽 3대 정신(pillars)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최도시의 환경질이 경기력 향상과 대회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양국간의 환경수준이 직접 비교가 되고 또한 우리의 환경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10개 개최도시 및 월드컵조직위원회와 함께 「국제경기 환경관리종합지침」과 「월드컵 D-100일 대비 월드컵 중점관리 환경대책」을 마련하였고, 4개 민간단체와 함께 「월드컵 10대 시민 환경실천수칙」을 만들어서 환경월드컵 홍보·실천운동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첫째, 대회기간중 오존, 미세먼지 등 개최도시 대기질이 전년보다 상당수준 개선되었다. 월드컵 기간중 서울지역 미세먼지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20.4% (95→78 $\mu\text{g}/\text{m}^3/\text{일}$), 오존농도는 11.5%(26→23ppb) 떨어졌고, 개최도시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일본의 1/3 수준(일본 : 오사카 등 5개도시 11회, 한국 : 서울·수원 등 2개도시 3회)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말 58대로 시작된 매연 없는 천연가스버스(NGV)가 월드컵 기간 동안에 서울 803대 등 전국 2,026대로 늘어나 경기장노선을 중심으로 운행되었는데, 일본이 '94년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



400여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5월부터 수도권 초저황경유(황합량 430→15ppm) 및 저황중유(0.5→0.3%) 보급, 경기 전·당일 차량2부제 운행과 함께, 운행차량·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경기장 주변, 거리응원장소 등 도시 곳곳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었다.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토지·건물의 소유주 등이 책임지고 치우는 '청결유지책임제'를 새로 도입하였고, 10개 개최도시에 총 231개 기동청소반을 편성·운영하여 청소대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서울시청앞 등 전국 400여개 거리응원장소에서는 응원 후 시민들이 자율청소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월드컵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셋째, 대규모 쓰레기매립지인 서울 난지도의 '월드컵공원' 조성 등 경기장 주변 6개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고, 도시녹화('00년 이후 수목 3,661만그루, 꽃길 1,800여km), 공중화장실 정비, 자연형하천 조성 등에 주력하였다. 넷째,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도 환경부·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의 합동모니터링 결과 이전의 어느 축구대회보다도 청결하고 쾌적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장 쓰레기 다량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물류 음식물의 매장판매금지, 홍보물과 1회용 비닐막대풍선 배포억제 등으로 2001년 월드컵 경기장 개장행사시 평균 18.1톤이던 쓰레기 발생량이 월드컵 경기때는 11.2톤으로 약 38.1%가 줄었다. 또한 관중석 내 흡연행위가 자취를 감췄고, 새로 제작된 1분짜리 「전광판 클린업 영상홍보물」('Dynamic Korea, Clean Korea')를 130여회 상영하여 시민 클린업리더, "붉은악마" 등 80~90% 이상의 관중이 경기 후 자기쓰레기를 치워 "클린업타임(Clean-up time)제가 완전 정착됨으로써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응원 문화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월드컵 시책 이외에도 환경(Ecology)과 경제(Economy)의 조화와 상생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동시에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에코-2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둘째, 매체별 환경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1) '푸른하늘 21 특별대책' 추진 기반마련 2) 2001년 말에 제정된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와 쓰레기중량제의 개선 3)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체계적 보전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셋째, 금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의 준비 및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한 중 일 3국 환경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협력 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3. 2002년 하반기 주요 환경정책방향

가. 「에코-2 프로젝트」추진

환경과 경제의 상생(相生)을 기치로 환경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에코-2 프로젝트」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선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작년에도 중국 북경에 설치한 '한국 환보기술전시청'을 거점으로 WTO 가입, 올림픽 유치 등을 계기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시장('01~'05년간 112조원 투자계획)을 국내 환경산업체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환경시장 정보 수집 제공, 공동 협력사업 추진, 수출마케팅 활동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7.4~5간 중국 북경에서 전시청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한·중 환경산업투자포럼이 개최되며, 이를 계기로 단기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측정장비 및 부품, 환경상품 추가 전시 등 전시청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협력회의, 환경산업체 현장견학, 환경산업협력단 파견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의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환경시설·기술·제품 등을 총망라한 한국우수환경산업 홍보집을 발간하여,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KOTRA 등에 비치하여 해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되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의 경우 금년도 신규지원과제 62개과제(107억원)와 2001년도 추진과제에 대한 계속지원과제 185개 과제(485억원)가 확정되었다. 환경부는 현재 작성중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첨단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01년 500억원 → '02년 700억원)하고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환경신기술 우선 적용, 장려금제·성공불제 도입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과 '환경신기술실용화촉진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또한 기술개발자와 수요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8.29-31간 환경신기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환경기술인력 공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이버 환경전문인력은행을 운영하는 등 환경인력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수급의 중개역할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푸른하늘 21」특별대책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은 반면 산업활동이 활발하여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OECD국가에 비해 2~10배가 많고, 자동차는 2000년 1,205만대로 지난 30년간 약 30배가 증가하였고 또한 에너지 사용량도 매년 8~10%씩 증가하는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편이다. 배출시설 및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단계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증가 등에 따라 대기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기존의 배출저감수단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사후적인 농도규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배출허용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원의 증가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인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대기질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공장, 발전시설, 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되, 총량규제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등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천연가스차,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량 보유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는 미국의 ULEV(Ultra Low Emission, 2004년), 경유차는 유럽의 2005년 수준(EURO 4)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시내버스, 통근버스, 마을버스(중형), 청소차 등을 CNG차 또는 LPG차로 대체하고 화물트럭 등 경유차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천연가스버스의 확충을 위하여 버스가격 차액(대당 3,100만원증 2,250만원)을 보조하고 충전소 설치비용도 전액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한편,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이동충전차량 보급기반 마련 등 충전소 확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또한 경유차에 휘발유 경유의 황함량, 벤젠, 증기압 등의 품질기준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 4대강 유역환경관리체제 구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안이 '01.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로소 4대강 수계에 대한 체계적인 유역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3대강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7.1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본적인 수질보전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수질관리수단으로 이들 3대강 대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라 할 수변구역의 지정에 위하여 환경부는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주민대표 등과 함께 현지를 조사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

로 수변구역 고시 도면(안)을 8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비료의 사용이 제한되고 상수원주변 토지가 우선적으로 매수된다. 또한 상류지역의 규제에 상응하여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토대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동기금에서 상류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수행할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한 행정조직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 사전예방적 국토환경보전 기반구축

지난 40년간 경제발전과 공급·효율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 국토가 훼손되어 왔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환경이 삶의 질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사전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근거규정을 대폭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올해에는 우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토환경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국토환경보전계획(’03~’12)」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토환경보전의 목표와 추진전략, 토지의 환경성평가,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구분기준, 친환경적 개발계획기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의 자연환경 현황과 각종 보전지역 등을 포함한 「국토환경지도」를 제작하여 과학적인 국토환경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단계부터 과학적 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친화성이 제고되도록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우선 3대강 수계별 특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 등을 추가·확대하는 한편, 아울러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인력 보강,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보급함과 동시에 관계자 합동연찬회와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선진화를 위하여 중·장기적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행할 '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향평가에 관한 각종 통계 및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영향평가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보다 환경친화적 평가기법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지침'을 작성중에 있다.

마. 체감 환경질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먹는물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농어촌·도서지역·중소도시 등 급수취약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정수처리기술기준제'가 도입되고 병원성미생물의 지표수질기준과 소독부산물질 등 먹는



물 수질기준이 기존 47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강화된다. 노후수도관 개관을 위하여 금년에 2,446km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또한 종래의 절수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금년까지 227만가구('01년 102만 가구)에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폐기물분야에 있어서는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재활용 의무를 지닌 대상제품과 목표량,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 등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전제품, 형광등, 금속캔, 유리병, 타이어에 이어 금년중 윤활유, PC(컴퓨터), 플라스틱류까지 자발적협약 대상을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7월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중량제시행지침」에 따라 재사용 중량제봉투 보급, 1회용 비닐봉투 별도 분리수거 대형폐기물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마을단위 중량제 도입 등 쓰레기 중량제가 개선된다.

최근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토양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용산 미군기지내 유류저장시설 기름누출로 인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유류오염사건, 육군 구 정비창 부지였던 부산 문현지구 유류오염, 폐금속광산지역 주변의 중금속 오염문제 등은 토양오염 및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 문제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공장이나 주유소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당사자가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 상태를 미리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한편 오염원인자 범위의 확대는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실제 토양오염을 야기한 자뿐만 아니라 당해부지를 양수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서 토양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금년 7월부터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수행하여 오던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모든 배출업소 지도·점검 기능이 지자체로 일원화된다. 반면 환경부에는 4대강 환경감시대가 정규직으로 설치되어 상습위반업체,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금년 8.26~9.4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는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지구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

획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회의에는 전세계 189개 유엔회원국, 국제기구, NGO 등 6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차례에 걸쳐 개최된 준비회의에서 각국은 빈곤퇴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조성, 공격개발원조의 확대 등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기후변화 협약, 세계화 및 보건 등을 포함한 환경·사회·경제분야의 현안해결을 위한 이행방안도 각료회의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아울러 UN차원의 WSSD 준비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21세기 들어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년 10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제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의무부담 방안이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효율제고 및 대체에너지개발, 친환경적 연료전환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을 망라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WTO 뉴라운드 범정부 대책기구에 환경분야 실무협상대책반을 설치하여 무역·환경 연계 의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 금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황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중·일 황사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 서부지역 생태복원사업 및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 등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력과제를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UNDP, 지구환경기금(GEF)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에 이어 「백두대간 생태계보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구환경금융촉과 협의중이다.

4. 맺는말

월드컵 기간중 도시환경과 경기장 전반이 쾌적하게 유지됨으로써 국내 환경수준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성공을 밑거름으로 민·관 역량을 결합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월드컵 종합백서」를 발간하여 차기 국제대회의 친환경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임을 고려하여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환경정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